

|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 개관 1년, 전문가 세미나 |

“세계유산과 강제동원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

2021.2.24.(수). 14:00~17:00

재단 대회의실(온라인 화상회의)

웹사이트 개설 취지와 내용	11
남상구(동북아역사재단)	
증언이 말하는 강제노동의 실태	19
김승은(민족문제연구소)	
산업유산정보센터 전시와 강제노동	31
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展示・強制労働	
다케우치 야스토(竹内康人,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산업유산정보센터 운영 실태와 산업유산국민회의	53
고바야시 히사토모(小林久公,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산업유산 해설자 양성 가이드 분석	65
노기 가오리(野木香里, 민족문제연구소)	

토론문	77
슈메이 황(Shu-Mei Huang, 대만국립대학)	
토론문	79
이현경(한국외국어대학교 문화유산학센터)	
토론문	82
전진성(유네스코한국위원회)	

<p>제1부 사회: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웹사이트 <일본의 산업유산, 왜곡의 현장과 은폐된 진실>이 말하는 강제동원과 세계유산</p>		
제1발표	14:15~14:35	웹사이트 개설 취지와 내용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제2발표	14:35~14:55	증언이 말하는 강제노동의 실태 (김승은, 민족문제연구소)
<p>제2부 사회: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산업유산정보센터와 산업유산국민회의</p>		
제3발표	15:00~15:20	산업유산정보센터 전시와 강제노동 (다케우치 야스토(竹内康人),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제4발표	15:20~15:40	산업유산정보센터 운영 실태와 산업유산국민회의 (고바야시 히사토모(小林久公),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제5발표	15:40~16:00	산업유산 해설자 양성 가이드 분석 (노기 가오리(野木香里), 민족문제연구소)
종합토론	16:10~17:00	슈메이 황(Shu-Mei Huang, 대만국립대학), 조 건(동북아역사재단) 이현경(한국외대), 전진성(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제1부 |

웹사이트 <일본의 산업유산,
왜곡의 현장과 은폐된 진실>이
말하는 강제동원과 세계유산

웹사이트 개설 취지와 내용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증언이 말하는 강제노동의 실태
(김승은, 민족문제연구소)

| 제1발표 |

웹사이트 개설 취지와 내용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웹사이트 개설 취지와 내용

남상구(동북아역사재단)

1. 왜 만들었는가

- 2015년 7월 5일 군함도를 비롯한 일본 근대산업유산 23개 시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됨. 등재 당시 일본 수석대표는 ‘한국인과 여타 국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brought against their will)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했다(forced to work)’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함.

※ 한국 수석대표는 ‘위원회의 권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일본 정부가 오늘이 권위 있는 기구 앞에서 발표한 조치들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위원회의 컨센서스 결정에 동참했다고 발언함.

- 일본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 종료 직후인 7월 14일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수석대표 발언이 강제동원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함
 - 즉 “의사에 반하여 끌려와서”와 ”강제로 노역하였으며“라는 것은 한반도 출신자에 대해서는 당시 한반도에 적용되었던 국민징용령에 기초한 징용이 실시되어, 그 정책의 성질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징용된 일도 있었다는 의미라고 주장
 - 그리고 ‘징용’은 1944년 이후 국민징용령이라는 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국제법상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 일본정부는 2017년 11월 세계유산위원회에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State of Conservation Report)」를 제출함.
 - 도쿄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과 '한국인 노동자가 일본 산업을 지원했다(supported Japanese industries)'는 해석전략이 포함됨.
- 2018년 6월 세계유산위원회는 '2015년 결정문을 충실히 이행할 것'과 '당사자 간 대화(dialogue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를 권고하나, 일본은 이를 이행하지 않음.
- 일본정부는 2020년 3월 31일 도쿄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개관했는데, 한국인 등을 강제동원해서 노역을 시켰다는 내용은 들어가지 않음.
 - 강제노동과 민족차별은 없었다는 군함도(하시마탄광) 주민 증언과 월급명세서 전시
 - 조선인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단체인 <산업유산국민회의>가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위탁 운영
- 한국인, 중국인, 연합군 포로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일본 근대산업시설에 강제로 동원되어 노동을 강요당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한일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 의한 전쟁 피해의 역사적 사실을 밝힌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일본 초중고 교과서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이 기술됨.
- 도쿄의 <산업유산정보센터>가 외면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 세계유산의 존재 의미를 묻고자 함.
 - 일본 근대산업시설이 침략전쟁에서 수행한 역할과 강제동원·강제노동 실태, 피해자 증언, 다른 나라의 세계유산이 강제동원을 기억하는 방식 등을 소개

2. 누가 만들었는가

- 웹사이트의 내용은 한국의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의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가 함께 만든 세계유산 가이드북 『일본의 메이지산업혁명유산과 강제노동』(2017) 등에 근거하여 민족문제연구소가 작성함.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등의 연구성과도 활용함.
- 앞으로 일본 근대 산업유산시설의 문제점과 강제동원·강제노동의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업로드할 계획임.

3.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구성은 아래와 같음(<http://contents.nahf.or.kr/item/item.do?itemId=jsjs>).

1. 일본의 산업유산 등재와 역사부정

1-1. 일본 산업유산이란

1-1-0. "지켜지지 않은 약속"

1-1-1. 세계유산이 된 일본 근대산업시설

1-1-2. 미화된 메이지의 성공신화

1-2. 일본은 약속을 지켰나

1-2-1. 전체 역사를 알게 하라

1-2-2. 2017년 이행경과보고서 내용

1-2-3. 2019년 이행경과보고서 내용

1-2-4. 산업유산정보센터, 역사부정의 현장

2. 일본 산업유산이 외면한 역사

2-1. 전쟁과 산업화, 그리고 일본의 산업유산

- 2-1-1. 일본 근대화의 출발
- 2-1-2. 강제동원·강제노동의 역사
- 2-1-3. 중국인, 연합군 포로의 강제노동

2-2. 일본 산업유산 속 강제노동 역사

- 2-2-1. 야하타제철소
- 2-2-2. 미쓰비시 나가사키조선소
- 2-2-3. 미쓰비시 다카시마·하시마탄광
- 2-2-4. 미쓰이 미이케탄광

3. 기억의 계승과 세계유산

3-1. 유네스코 현장의 정신과 세계유산

3-2. 아우슈비츠가 전하는 세계유산의 가치

3-3. 세계유산 속 강제노동 역사

- 3-3-1. 볼리비아 은광 도시 포토시(Potosi)
 - 3-3-2. 영국 리버풀(Liverpool) - 해양 무역 도시
 - 3-3-3. 독일 램멜스베르크(Rammelsberg) 광산
 - 3-3-4. 독일 에센의 즐버레인(Zollverein) 탄광 산업단지
 - 3-3-5. 독일 필클링겐(Völklingen) 제철소
- 독일 산업유산과 강제노동

4. 사라진 목소리, 사라진 역사

4-1. 산업유산 관련 한국인 피해자 증언

- 4-1-1. 야하타제철소
- 4-1-2. 미쓰비시 나가사키조선소
- 4-1-3. 다카시마탄광
- 4-1-4. 하시마탄광

4-2. 산업유산 관련 중국인 피해자 증언

- 4-2-1. 야하타제철소
- 4-2-2. 미쓰비시 다카시마탄광
- 4-2-3. 미쓰비시 하시마탄광
- 4-2-4. 미쓰이 미이케탄광

4-3. 산업유산 관련 연합군 포로 피해자 증언

- 4-3-1. 야하타제철소
- 4-3-2. 미쓰비시 나가사키조선소
- 4-3-3. 미쓰이 미이케탄광

5. 교과서로 본 강제동원·강제노동

5-1. 일본 교과서로 본 강제동원

- 5-1-1. 초등교과서
- 5-1-2. 중등교과서
- 5-1-3. 고등교과서

6. 관련자료

- 6-1. 한국정부의 진상조사 보고서
- 6-2. 피해자의 호소

| 제2발표 |

증언이 말하는 강제노동의 실태

김승은

(민족문제연구소)

증언이 말하는 강제노동의 실태

김승은(민족문제연구소)

1. 역사부정의 공간, 산업유산정보센터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가 개관 1년을 앞두고 현재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피해자’ 증언을 둘러싼 ‘진실’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는 피해자의 증언이 밝혀온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의 역사를 ‘누락’시키거나 ‘부정’하는 해석전략을 현실화시킨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역사를 알게 하라”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는 정면으로 무시되었고,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에서 노역하였다.”라고 인정한 발언은 왜곡되었다.

이러한 전략은 일본 정부가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등재 하루 만에 번복한 해석과 그 참고 해설에서 이미 예견되었다. 두 차례 제출된 보전상황보고서에도 강제노동을 한 ‘구 한반도 출신자’들은 일본의 산업을 ‘지원한’(supported) 노동자로 바뀌어 서술되고 있다. 2018년 개최된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 “관계자와의 대화를 계속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가 있었지만 일본 정부가 대화를 추진한 관계자는 산업시설의 소유주, 지역주민, 산업유산 추진기관이나 단체들로 국한되었다.

2015년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등재 당시에도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와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는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답아라!”¹⁾ 그리고 일본이 등재시키고자 하는 산업유산은 식민지 조선인, 중국인, 연합군포로 뿐만 아니라 일본인 노동자의

1) 당시 세계유산위원회 회원국에 보낸 피해자 호소문은 「일본의 산업유산, 왜곡의 현장과 은폐된 진실」 웹사이트 “6-2 피해자의 호소” 편에 게재되어 있다.

피와 땀, 눈물의 현장이었다는 사실 또한 한·일 시민사회는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린 현장에서 한일 시민단체는 참여 회원들에게 직접 호소했다.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저지른 인류의 죄악을 반성하기 위해 설립된 유네스코 정신을 환기시키며 어두운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교육과 성찰의 현장으로 보존하고 있는 유네스코의 교훈과 실천을 강조한 한국 시민단체의 메시지는 세계유산위원회 참여 회원들의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규슈·야마구치의 근대화산업유산군”이라는 명칭으로 등재를 추진하던 일본 정부도 “산업을 지탱해 온 사람들, 역사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 그들의 땀으로 일궈낸 생활문화와 지혜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산업유산’이라고 그 가치를 선전한 바 있다.”²⁾ 물론 비서구권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산업혁명의 사례로써 서구권의 관심과 이해를 끌었겠지만, 그 산업화의 역사에 담긴 사람들, 그들의 희생을 기리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후는 달라졌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노동”의 역사는 사라졌고, “테크놀로지는 일본의 혼”이라는 문구가 등장했다.³⁾ 일본의 근대 기술혁신과 산업발전만 클로즈업 한 설명으로 세계유산의 가치가 요약되었다. 더 나아가 강제동원·강제노동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지자 등재 추진 책임자는 산업유산 시기가 1910년으로 구분되면서 메이지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은 “강제동원·강제노동과는 상관없는 시설”이라고 강변하기에 이르렀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로 인한 노무동원의 강제성 자체를 부인해 왔다. 강제노동의 현장에서 민족차별은 없었고, “전쟁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 아래” 다 같이 “참기 힘든 괴로움과 슬픔을 안겨 주었다”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일본 산업유산은 그런 어두운 역사는 외면하고 산업발달의 성과만을 부각시키는 역사 미화의 현장이다. 등재 이후 일본 정부의 이러한 해석전략과 입장은 세계유산 등재 5년이 지나는 동안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왜곡의 확대재생산이 벌어지고 있다.

2) 이 설명은 「제1회 가동자산을 포함한 산업유산에 관한 유식자회의」에 배포된 자료7 「九州·山口の近代化産業遺産群」에 수록된 내용이다. 등재 추진 당시 홈페이지에도 이와 같은 표현이 소개되었다. 현재 내각관방 홈페이지 産業遺産の世界遺産登録推進室에 공개된 회의 관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as.go.jp/jp/sangyousekaiisan/sangyouisan/yuushikisya/kadouisan01/index.html>)

3) 현재는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설명하는 문구가 ‘산업일본의 발흥’으로 바뀌었다.

2. 피해자의 ‘증언’으로 입증한 강제동원의 피해

일본 정부의 이러한 몰역사적 입장은 그동안 피해자들의 증언과 시민들의 진상규명 활동, 학자들의 실천적 연구로 극복되어 왔다.⁴⁾ ‘문서기록’을 장악한 가해자가 ‘실증주의’를 무기로 피해자들의 주장을 부정해 왔지만, 자신의 몸이 범죄의 증거임을 들어 피해자들은 많은 증언을 통해 남겼다. 김학순의 공개 증언 이후 살아있는 피해자의 증언을 부정하는 현실, 이를 향한 아래로부터의 기억투쟁이 본격화했다. 더불어 진상규명 과정에서 강제동원 관련 명부 등 많은 기록물들이 발굴되었다.⁵⁾ 이를 토대로 1990년대 본격적으로 진행된 ‘전후보상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원고 진술’을 통해 공식적인 피해자의 ‘증언’을 일본 사법부의 재판 기록 속에 남겼다. 이러한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운동은 한국에서 국가차원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이끌어내는 밑거름이 되었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활동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후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이하 ‘한국위원회’)는 총 226,583건 피해자 조사와 진상규명을 추진했다. 피해자로 인정된 218,639건 중 피해 분야별로 노무동원(148,961건)과 병력동원(155,479건)은 7:3 정도였다. 그 가운데 “강제동원 피해 사실만 인정될 뿐 동원 유형이나 일시, 장소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피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6,000여 건이 넘었다.”⁶⁾ 그 가운데서 노무 피해 신고자 중 5,213명이 판정불능을 받았다는 것은 노무동원 피해를 입증할 관련 기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는 피해생존자의 경우, 인우보증과 피해 진술 내용이 충실한 경우는

4) 1990년대 이후 급증한 강제동원 관련 논저 목록은 강제동원 관련 논저 목록은 한일민족문제학회 강제연행문제 연구분과, 『강제연행 강제노동 연구 길라잡이』, 선인, 2005 ; 민족문제연구소, 『강제동원 관련 문헌목록집-강제동원 위안부 역사왜곡(일제침탈사 자료조사 연구결과보고서 2007-4)』, 2007[미간행고] 참조

5) 竹内康人, 「日本での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現状と課題」(強制動員真相究明ネット 第6回研究集會での報告), 2013 참조.

6) 국무총리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2016, 182쪽.

그나마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생존자 또는 목격자들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해 1차적으로 기초 조사를 시행하였다. 부족한 입증 문서 자료의 한계 속에서 생존자의 '증언'은 피해조사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이자 유일한 근거 자료로 널리 활용되었다. 이를 토대로 심의조서가 작성되고 위원회에 상정, 피해여부를 심의·의결하였다.

한국위원회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생존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43,712명 가운데 총 2,021건의 구술기록을 수집했다. 그 가운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집중적으로 구술기록집이 발간되었다. 노무동원 편 9권, 병력동원 편 4권, 여성동원 편 2권 등 15권에 총 219건의 증언이 수록되었다. 이 증언 속에서는 일본의 산업유산 시설과 관련된 증언기록이 12건 수록되었고, 위원회가 작성한 진상규명 조사보고서에 증언 20건이 추가로 확인된다.⁷⁾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과거청산 작업을 통해 '공식화'된 피해자의 '증언'이 강제동원의 '진상'을 어떻게 복원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 피해자의 '증언'이 말하는 강제노동의 현장

한국위원회가 발간한 구술기록집에 실린 노무동원 피해자는 모두 110명이다. 이들의 동원 시기는 1937년부터 1945년 4월까지 분포되어 있고, 1942년(20명), 1943년(37명), 1944년(31명), 1945년(10명)에 집중되어 있다. 1942년부터 해외로의 징용자 수가 증가하여 1944년 급증하는 추이와 다르지 않다. 동원 당시 나이는 10대(만13세~19세) 66명, 20대(만20세~29세) 42명이고, 30대(만32세)도 2명이 있었다. 이들의 증언은 강제동원의 다양한 역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으로는 '강제동원'으로 연상되는 '인간사냥', '노예', '감옥살이' 등의 인상은 그들의 증언에서 보편적이고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처지를 '노예' '죄인' '개돼지' '우물에 안에 갇힌 고기' '감옥에 갇힌 죄수'라고 표현했고, 그들에게 강제동원이란 "가라!" 하면 가야 하는 거부할 수 없는 "형벌" 같은 것이었다.

7) 이들 증언이 실린 구술기록집은 『똑딱선 타고 오다가 바다귀신 될 뻔했네』(2006), 『지독한 이별, 사할린 이종징용 진상조사 구술기록』(2007) 『내 몸에 새겨진 8월, 히로시마,나가사키 강제동원 피해자의 원폭체험』(2008) 등이다. 피해자 증언 조사가 실린 보고서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조선인 원폭피해 진상조사』(2011), 『사망기록을 통해 본 히시마 탄광 강제동원 조선인 사망자 피해실태 기초조사』(2012) 등이다.

산업혁명 관련 시설에 동원된 12명의 피해자의 경우, 동원당시 나이가 10대가 6명, 20대가 6명이다. 동원경위를 보면 일본에서 전환배치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장이나 면장, 순사 등 행정력의 개입에 의해 모집 당했고, 징용되는 길이었다고 회고했다. 지역마다 할당된 인원을 모집할 때는 강제력을 수반했다.(임원재, 20세, 1942.3, 미쓰비시 나가카시조선소/김치용, 24세, 1943.8, 사할린→다카시마탄광/정복수, 17세, 1943, 사할린→다카시마탄광)

김종술(19세, 1944.2, 나가사키조선소)은 9살에 양자로 간 신세로 일찍 돈을 벌기 위해 모집에 응했다. '자발적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이 다른 선택지가 없는 채로 징용을 가게 된 사례도 많다. 이미 일본을 다녀왔던 문갑진(23, 1941.10, 사할린→하시마탄광)은 일본을 '동경'해서 대구직업소개소 광고를 보고 모집에 응했다. 그러나 "아무리 일본에 미쳤어도 사할린 지하탄광에 탄 캐는 일인 줄 알았으면 안 갔을 것"이라고 문갑진은 후회했다.

'회유'가 통하지 않으면 '협박'을 받았다. 어린 이천구(15)도 순사와 면서기가 "징용에 징발되었으니까 며칠까지 면사무소로 오라"고 해서 징용을 갔다. 도망가면 부모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거부할 수 없었다고 했다. 마을에서 15명이 출발해 부산에 도착하니 도별로 모인 인원이 3,000명이었다. 이들이 1942년 9월 도착한 곳은 일본제철주식회사 야하타제철소였다.

노골적인 회유와 협박으로도 필요한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극단적 방법-납치-가 동원되었다. 아버지 심부름 가던 길에 손용암(15세, 1943.11, 사할린→다카시마탄광)은 속초역 앞에서 경찰에 연행되어 끌려갔다. 면이나 군 단위로 징집되어 적게는 20명 많게는 200명이 같은 곳으로 연행되는 경우도 많았다. 대규모 작업장이 대부분인 일본 산업유산 시설들에 동원된 조선인들은 이렇게 대규모로 연행된 자들이 많았다. 그 가운데 일본 현지에서 징용된 이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일본어가 능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치껏 알아서 일을 해야 했다. 기술훈련 같은 것은 없어도 직장 내 규율 확립을 위한 군사훈련과 일본어 교육은 있었다.

노동시간은 주로 8시간~12시간, 주야 2교대, 탄광의 경우는 3교대였다. 매일 정해진 채탄량, 작업량을 채우지 않으면 급료가 깎이고, 갭 안에서 나올 수도 없었다. 숙소는 감시가 없다 하더라도 외부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고, 용돈 정도의 급여가 지급되었지만 외출을 할 만큼 소지한 돈도 없었다. 그래도 외출을 한다면 먹을거리를 찾아서 나가는 것이었다.

사할린에서 전환배치 된 김치용, 손용암, 정복수, 문갑진, 황의학(21, 1942.8, 사할린→하시마탄광)은 식량사정이 더 열악했던 다카시마, 하시마의 생활을 지옥 같은 괴로움으로 기억했다. "사할린에서는 죄인 취급하더니, 나가사키에서는 개돼지 취급했다."는 말 한마디가 그들의 고통을 대변했다. 탈출의 가장 큰 동기는 배고픔이었다. "월급을 제대로 주나, 일을 해야 품값을 제대로 주나, 그렇다고 2년 기한차면 내 보내주나, 여기 있어봐야 평생, 징역살이여, 우리 도

망가져!”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은 한둘이 아니었다. 이천구(15, 1942.9)는 1943년 배가 고파 식당에서 밥을 훔쳐 먹고 탈출해 근처 공장 잡부로 몸을 숨겼다. 이들이 탈출에 성공한 이유는 새로 숨어들 일터가 많았기 때문이다. 청년 노동자는 늘 부족했고, 유동하고 있었으며, 어디선 가는 죽고 다치는 일이 반복되었다.

산 자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기록(사망기록) 또한 강제동원의 실태를 밝히고 있다. 『사망 기록을 통해 본 하시마 탄광 강제동원 조선인 사망자 피해실태 기초조사』에 의하면 조선인 사망자는 1942년부터 1944년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는데, 강제동원 규모의 급증, 탄광 노동에 익숙하지 않은 조선인의 갱내 투입 비율 증가, 장시간 노동 강요, 열악한 채탄 현장 배치 등이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사망원인 분석 결과, 질병으로 사망한 조선인은 영양실조, 비위생적인 생활환경과 열악한 노동환경이 그 배경이었고,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와 변사자 대부분은 탄광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보이나 가혹행위에 따른 죽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강제동원된 조선인이 하시마에서 사망에 이른 1차 원인은 ‘강제동원’이며 2차 원인은 ‘열악한 노동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사보고서 실린 15명의 생존자 증언은 이러한 사망실태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수의 생존자는 하시마탄광에서 살벌한 감시와 잦은 구타를 증언했다. 또한 탄광의 굴이 무너지는 사고가 잦아서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많았다는 증언도 반복된다. 섬이기 때문에 탈출이 어려웠으나 도망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대부분 잡혀와 모진 고문을 당했다는 회고는 왜 하시마가 지옥섬, 감옥섬이라고 불렸는지를 연상시킨다.

이러한 강제동원의 피해는 이미 일본과 한국의 사법부에서도 인정한 사실이다. 미쓰비시 나사카시조선소를 상대로 한 김순길의 소송에서 그가 입은 피해는 “감시체제하에서 감금상태에 가까운 상태에서 노동에 종사시켰고 국민징용령에 기초해 볼 때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에 의한 것이었음을 일본 사법부가 인정했다. 한국 대법원에서도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강제동원 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지 못한 채 온갖 노동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배상의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4. 공공의 기억으로 남겨야 할 강제동원 강제노동의 역사

일본의 산업유산정보센터는 피해자의 몸에 새겨진 강제동원 진실을 부정하기 위해 하시마도민들과 어린 시절 하시마에 거주했던 이들의 증언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사망한 피

해자의 증언을 또 다른 생존자의 증언으로 부정하겠다는 비인도적인 시도는 오히려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이 숨기거나 외면하는 역사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주목하게 만든다.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유산인 루르탄전의 즐베레인 탄광이나 자르탄전의 펠클링겐 제철소는 일본과는 정반대로 자신들의 유산의 가치를 해설하고 있다. 독일 중공업화 200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두 산업유산은 1·2차 세계대전 당시 자신들의 생산 활동이 전쟁에 어떻게 부역했으며, 유대인과 외국인, 전쟁포로가 강제노동을 당한 현장이라는 사실을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다. 루르뮤지엄은 지난 200년간의 변영, 삶의 질, 교육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그 이면의 산업화의 부작용, 즉 비참한 노동환경, 사회적 불평등,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 등을 함께 다루고 있다.⁸⁾ 펠클링겐제철소의 경우 1만 2천명의 강제노동 피해자의 이름과 동원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산업화의 밝은 면만이 아닌 어두운 면도 똑같이 주제화하여 관람객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⁹⁾

이와 같이 산업유산은 기술혁신의 유형의 자산만이 아니라 유산과 연관된 인간 활동 전반을 포함하고 있으며, 산업화의 부작용, 어두운 역사도 함께 고찰되어야 하는 세계유산이다. 부정되는 피해자의 증언을 공식적인 기억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와 관련해 한일 시민사회가 구축해 온 강제동원 관련 정보를 공공의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와 민족문제연구소는 2017년 가이드북을 공동제작 하였고, 이번에 동북아역사재단에 게시될 웹 사이트를 구축하였다. “일본의 산업유산-왜곡의 현장과 은폐된 진실”은 현재 일본 산업유산 정보센터의 문제점과 그들이 은폐한 역사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언하고 있는 강제동원·강제노동의 역사이다. 이를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해 그동안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함께 투쟁하며 공개하고 기록해 온 증언과 사료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 이로써 과거를 극복하기 위한 현재 시민들의 노력은 미래를 위한 사료로 거듭나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다.

8) 루르뮤지엄의 상설전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https://www.ruhrmuseum.de/dauerausstellung/geschichte/bilanz/>).

9) 펠클링겐제철소 전시회에 ‘강제노동’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https://www.voelklinger-huette.org/en/die-roechlings-und-die-voelklinger-huette/die-zwangsarbeiter/>)

| 제2부 |

산업유산정보센터와 산업유산국민회의

산업유산정보센터 전시와 강제노동

(다케우치 야스토(竹内康人),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산업유산정보센터 운영 실태와 산업유산국민회의

(고바야시 히사토모(小林久公),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산업유산 해설자 양성 가이드 분석

(노기 가오리(野木香里), 민족문제연구소)

| 제3발표 |

산업유산정보센터 전시와 강제노동

다케우치 야스토

(竹内康人,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산업유산정보센터 전시와 강제노동

다케우치 야스토(竹内康人,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1. 총리 관저 주도에 의한 세계유산 등재 및 ‘아베 안건’

총리 관저 주도에 의한 메이지일본 산업혁명 유산 등재

핵심 역할을 한 가토 고코(加藤康子)의 부친은 고(故) 가토 무쓰기(加藤六月), 그는 아베 총리의 벗으로 아베의 활동을 이해.

2012년 말, 아베 내각(2차) 출범

2013년 3월, 내각 관방에 ‘유식자(전문가)회의’ 그리고 그 산하에 산업프로젝트 팀을 설치, 가토를 코디네이터로 임명, 같은 해 9월, 산업유산국민회의(일반재단법인)를 설립(설립인 가토 고코, 전무이사에 취임)

2014년 4월, 전 유네스코 주재 일본대사인 기소 이사오(木曾功)를 내각관방 참여에 임명

2015년 7월,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위원회 직전 가토가 내각관방 참여로 기용됨(~2019년 7월 말), 사토 구니(佐藤地) 유네스코 주재 일본대사, 이즈미 히로토(和泉洋人) · 기소 이사오들과 7월의 세계유산위원회 등재를 목표로 활동

2015년, 메이지일본 산업혁명 유산 보전위원회(기소가 회장, 가토가 부회장), 동위원회 인터프리테이션 워킹그룹(가토가 좌장)이 회의를 개최

등재 당시 일본정부의 발언

7월 5일 등재 당시, 일본정부는 “일본은 1940년대에 몇몇 시설(site)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끌려와(brought against their will) 엄격한 환경에서 강제로 노역한(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 많은 한반도 출신자들이 있었으며, 또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조치

를 마련할 생각이다”, “일본은 인포메이션센터의 설치 등,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담을 생각이다”(일본정부 번역)고 발언하고 있다. 그 후 일본정부는 “forced to work”는 “일하게 되었다”일 뿐으로 “강제노동의 뜻이 아니며”, “전쟁 중 한반도 출신자의 징용은 국제법상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일본정부는 한반도 출신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징용되기도 하였으나, 위법한 강제노동은 아니었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2.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빠진 산업유산정보센터

가토 고코를 매개로 한 내각관방과 국민회의의 결탁 및 이익 유도

가토 고코 산업유산국민회의 전무이사가 내각관방 참여로 기용됨(2015년 7월~2019년 7월 말). 조사, 연구, 위탁 운영이 정부에서 국민회의로

산업유산국민회의에 의한 강제노동의 부정 ~ “군함섬은 지옥섬이 아닙니다”

산업유산국민회의가 “세계유산 군함도는 지옥섬이 아닙니다”라고 선전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진실의 역사를 추구하는 하시마 도민회 응원 페이지)에 게재. 국민회의는 ‘군함도의 진실’이라는 웹사이트도 운영.

“군함도는 우리의 고향입니다. 지옥섬이 아닙니다”

“날조된 역사의 선전에 우리는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인과 조선인은 함께 일했다. 경기가 좋아 가족들도 데리고 왔다, 다들 친구로 차별 따위 없었다(전 하시마 도민의 발언).

전쟁 중 강제로 끌려와 가혹한 학대를 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과 다른 증언이나 증거에 근거한 것. 강제연행이나 학대는 날조 등이라고 주장

세계유산 등재를 통한 관광지화와 전 하시마 도민의 향수를 자극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역사서술을 구축

역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피해자 편에 서서 고민하고 역사에서 인권과 평화의 교훈을 얻으려는 자세가 빠져 있다.

내각관방이 산업유산국민회의에 조사를 위탁

2016년도 ‘메이지일본 산업혁명 유산’ 산업 노동에 관한 조사	8964만 엔
2017년도 ‘메이지일본 산업혁명 유산’ 산업 노동에 관한 조사	1억 4580만 엔
2018년도 ‘메이지일본 산업혁명 유산’ 해석(interpretation) 갱신과 관련한 조사 연구	1억 2508만 4520엔
2019년도 ‘메이지일본 산업혁명 유산’ 각 시설의 전체 역사에 관한 해석(interpretation)과 관련한 조사 연구	1억 3299만 엔
2020년도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운영 개시를 향한 조사 연구	1210만 엔
2020년도 산업유산정보센터의 보급 계몽 홍보 등 위탁 업무	4억 3010만 엔
	총 9억 3571만 4520엔

이를 통해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자료 및 증언도 수집, 정보 공개 때는 보고서의 인명 등은 먹칠로 처리

산업유산국민회의가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음, 센터장에는 가토 고코가 취임

가토는 ‘가동 자산을 포함한 산업유산에 관한 유식자(전문가)회의’(2012) 위원, 국민회의(2013) 전무이사, 내각관방 참여(2015)를 거치면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등재를 추진하였다.

또 그녀는 ‘메이지일본 산업혁명 유산 보전위원회’(2015) 부회장, 그 산하의 ‘인터프리테이션 워킹그룹’(2015)의 좌장을 역임.

위원회 규약 중 “위원회에 부회장을 두고 가토 고코 위원이 이를 맡는다”(제3조의 6), 워킹그룹 설치요강 “워킹그룹에 좌장을 두고 가토 고코 위원이 이를 맡는다”(제2조의 2). 내각관방에서 꽃을 인물로 가토의 이름을 규약과 요강에 처음부터 명기. “인터프리테이션 추진에 관하여 일반재단법인 산업유산국민회의의 조언을 받는다”(동 설치요강 제2조의 6)고도 기재.

내각관방의 유식자회의 위원으로서 보전위원회 및 워킹그룹에서 실권을 장악. 가토 센터장의 의향, 이익이 보전위원회, 워킹그룹에 반영, 구체적인 사업은 국민회의에 위탁.

내각부·산업유산정보센터의 설립 경위

2017년 11월 「산업유산정보센터의 바람직한 방식 등에 대하여 제1차 보고서」의 ‘들어가며’

‘메이지일본 산업혁명 유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당시, 세계유산위원회는 결의를 통해 “전체 역사도 이해할 수 있는 인터프리테이션(전시) 전략”을 책정하도록 권고하였고,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와의 외교 협상에 입각하여 인포메이션센터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해당 전략에 담겠다고 발언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정부는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설치를 정하고, 그 방식 등을 검토하고자 본 검토회를 설치

여기서는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이라는 문구가 누락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 내용

2020년 3월, 개소

내각관방에 산업유산의 세계유산등록추진실, 내각부에 지방창생추진사무국(2016년~)을 설치

[내각관방이 기본 방침을 기획, 입안하고 내각부가 그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기획, 입안]

산업유산정보센터 1층은 ‘도입 전시, 메인 전시, 자료실’이라는 세 전시 ‘존(zone)’으로 구성.

존1에는 ‘메이지일본 산업혁명 유산’의 개요, ‘세계유산 등재까지의 여정’,

존2에는 ‘막부 말부터 메이지에 걸친 겨우 반세기 만에 산업 국가로 성장한 과정’

‘메이지일본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유산 가치 그리고 구성 자산 23곳의 세계유산 가치에 대한 공헌과 구성 자산의 ‘전체 역사를 전시’

존3에는 자료실을 마련하고, ‘제2차 세계대전 중 사업 현장의 산업 노동에 관한 자료 중 출처가 명확한 일차 사료, 이차 사료 그리고 증언을 다수 소개’.

2층은 사무 공간 외에 수집한 자료를 보관하는 자료 수장고, 연수실 등으로 구성.

「해석 전략의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내각관방 2020년) (이하 P17~)

(3)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등을 포함한 노동자에 관한 정보 수집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등을 포함한 노동자의 전전·전시 중·전후 산업 노동에

관해 조사하기 위해 일차 사료, 구두 증언, 출판물 등을 조사하였다.

산업 노동과 관련해서는 논문, 임금 등의 데이터, 재판 자료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산업유산·산업고고학 관련 해외 전문가로부터 산업 노동에 관한 해외 사례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조사, 신문 기사 등에서 하시마 탄광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채탄 현장인 갱내 상황을 전문가의 협력을 받아 조사하였고, 산업 노동의 현장 모습이나 환경, 분위기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전전부터 전후에 걸친 자료를 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 탄갱 안의 산업 노동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경험한 탄광노동 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였다.

[인용 주, 강제노동 부정 자료의 수집]

산업유산정보센터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정부가 징용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징용 정책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을 패널로 전시. [인용 주, 동원을 정당화]. 당시 일본인이나 한반도 출신자들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가혹한 환경에서 일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증언 영상 포함)를 전시. [인용 주, 차별의 부정]. 서가에는 산업 노동을 포함한 산업유산 전반에 관한 자료 등을 폭넓게 진열. 모니터로는 당시의 노동이나 생활에 관한 인터뷰 증언 영상을 시청할 수 있음. 아울러 증언 내용과 일기 일부를 패널로 만들어 전시. [인용 주, 전 하시마 도민의 증언을 편집해 강제 노동을 부정하고 차별을 부정].

3.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존3 자료실’

존3에는 전 하시마 도민의 얼굴 사진이 전시되어 있을 뿐, 메이지 시대의 증언자는 없다.

“국내외 산업유산 전반, 산업 노동, 징용 정책에 관해 서술된 것까지 포함해 폭넓게 진열”

“게 중에는 한반도 출신으로 징용된 노동자의 수기, 전시 중 사업 현장에서 한반도 출신자나 중국 포로와 함께 일한 일본인의 일기나 사료를 진열” (P32~)

전 하시마 도민의 수기[강제노동을 부정],

스즈키 후미오(鈴木文雄, 김문도) 증언, 부친이 하시마에서 일했고 ‘오장’의 지위에 있었음, [전쟁 중 사고가 다발하면서 하시마에서 전출]

도요공업(東洋工業)에 동원된 조선인의 한글 수기, 정충해『조선인 징용공의 수기(朝鮮人徵用工の手記)』

미이케탄광(三池炭鉱) 직원, 아오야(青谷昭二)의 책자류(강제연행을 부정하는 내용), 나가사키조선(長崎造船)에 전시 징용된 재류 타이완 출신자의 급여봉투 등(차별 없이 급여가 지급된 사례)

우익은 정충해의『조선인 징용공의 수기』중 고임금, 연애 등의 대목을 강제노동 부정에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면, 강제동원의 비애를 “일본에 강제로 끌려와 고된 일에 종사하던 우리 동포가 속속 귀국” 등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만큼 강제연행을 증언하는 기록이다. 정보센터는 한글 기사나 일문 번역본을 읽지 않은 채 강제를 부정하는 도서로 간주하고 있다.

또 패널 「징용 관계 문서를 풀다」에서는 관 알선, 징용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1939년부터 시작된 집단 모집 동원 문서가 빠져 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끌려와 혹독한 환경에서 강제로 노동하였다”는 ‘산업 노동’으로 뒤바뀐, 징용은 정당하며 강제노동도 차별도 없었다는 전시,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전시는 무시.

4.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폭로하는 정보센터장의 자질

가토 고코 「한국이 즉시 클레임 ‘산업유산정보센터」(《Hanada》 2020.9), 「기자인가, 활동가인가 아사히, 마이니치가 눈엣가시로 여기는 산업유산정보센터」(동 잡지 2020.10), 「취재 당사자가 고발 NHK ‘군함도 다큐멘터리’의 편향 수법」(동 잡지 2021.1), 이상을 집필한 저자의 직함은 산업유산국민회의 전무이사. 「군함도 전시 “징용공” 문제 왜곡 보도 NHK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가토 고코·아리마 테쓰오(有馬哲夫), 《WILL》 2021.1), 전 내각관방 참여·산업유산정보센터장이 라는 직함으로 글을 게재하고 있다.

이들 기사에서 가토 센터장은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방문한 기자와 시민의 실명 그리고 그 발언 내용을 들어 비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70명 조금 넘는 히시마 섬 주민을 취재한 결과,] “하시마에서는 한국 측의 주장과 같은 이른바 노예 노동의 증거나 증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강제노동 선전에 항의해야 하며] “일본정부는 과하게 신사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일본정부는 프로파간다에 확실하게 반론해야 합니다” “지금은 저 혼자서 일본의 일부 언론, 한국의 프로파간다에 반론하고 있고 정부는 이도 저도 아닌 태도를 보이고 있죠” [정보센터는] “담담하게 전 주민의 증언과 일차 사료를 수집, 전시해 ‘진실’을 알려 나가겠습니다”.
- [그릇된 인식이나 왜곡이 있다면 수정할 것이며] “저는 역사수정주의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 운동가인 야노(矢野) 씨와의 대화에서] “야노 씨가 무언가 감추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 역사 전쟁은 정부가 제대로 돈을 들여 의연하게 일차 사료와 전 도민의 증언 등 ‘팩트’를 알려 나간다면 야노 씨의 프로파간다에 질 일은 없겠죠”.
- “도민들은 전쟁 중 하시마에서 노동력도 물자도 부족한 가운데 섬의 모든 가정이 상부상조하면서 석탄을 캐고, 일터와 하나가 된 환경에서 생활한 모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이 좋던 공동체의 증언은 전체상을 가리는 만큼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그들의 증언을 일방적으로 의심하고 가해자 취급하는 행태야말로 하시마 도민에 대한 차별이자 편견입니다.”. “이 탄광 공동체에서는 전쟁 전, 전쟁 중, 전후를 통틀어 늘 출신은 차치하고 섬 전체가 괴로움도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고 울며 웃었습니다. 또 간장을 빌려주고 빌리면서 다 같이 목욕하면서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이비 활동가인 언론인들에게 묻고 싶다. 무고한 도민들을 가해자 취급하면서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 않냐’고.”
- [NHK의 프로그램인 <실감 도도도(實感ドドド)! 추억의 섬 ~ 흔들리는 ‘역사 계승’~>에서] “버젓이 역사 연구자로 나오던데요, 그 실체는 과격한 활동가입니다. 그런데도 NHK는 다케우치 씨가 그러한 반일적 활동을 해온 인물이라는 사실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더군요”. “프로그램은 ‘군함도의 세계유산 가치는 부정적 역사에 있다’는 강한 고정관념을 전제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정부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죠”, “한국의 주장에 서서 보도하고, 산업유산정보

센터의 전시 전략과 전 하시마 도민의 증언을 훼손하는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정치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송법 제4조 ‘정치적 공평성’을 일탈한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번에 NHK가 하야시 에이다이(林えいだい) 씨와 다케우치 씨 등의 주장을 방송하면서 근거가 빈약한 정보가 ‘기정사실화’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이 낸 수신료로 운영되는 NHK가 이러한 국익을 해치는 편향된 방송을 만들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 “노동=그림자, 노동=마이너스라는 등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단편적이죠. “탄광에 들어간 사람들도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 “제가 보기에는 ‘플러스’예요” “긍지를 품고 작업복을 입고 있었으니 부정적 역사 따위 들먹이지 말았으면 한다”. “탄광 노동을 ‘마이너스(負)’로 단정 짓고 ‘부정적 유산’으로 논하는 행위야말로 차별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을 전부 마이너스나 플러스라는 단편적인 논의로 나눌 수 있을까요. ‘이른바 피해자’의 한줌밖에 안 되는 증언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위도 확인하지 않은 채 가해자와 피해자의 낙인을 찍고 도민을 분열시키고, 피해자가 아닌 다른 자가 내는 하시마 생활에 대한 기억 전체를 가차없이 버리는 행위는 난폭하면서도 오만한 대응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5. 공적 시설에 걸맞은 전시와 관리자를

기사에 대한 비판

- 공적 전시 시설의 센터장으로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잡지에서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기재하고 있다. 더더구나 당사자의 활동 내용은 소문에 기반한 것으로, 그 기술에 오류가 있다. 센터장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 방문자를 촬영하는 등의 대응이나 낙인을 찍는 듯한 문체는 위기의식의 표출, 불관용, 완고함을 드러낸다. 국세로 운영되는 내각부의 전시 시설을 담당하는 위탁관리자라는 자각이 빠져 있다. 센터장은 내각부의 기관을 대표하는 자리로, 관람객으로 찾은 주권자인 국민과 외국 국적의 시민에게 경의를 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그녀는 비판하는 측을 ‘반일 언론’ ‘반일 활동가’ 등이라고 선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센터의 전시를 사유화하는 듯한 대응이다.

- 동원된 조선인의 증언에 관해 오류를 지적하고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하시마 도민의 어린시절이나 소문에 기반한 증언은 검증하지도 않은 채 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역사수정주의라는 용어를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용어는 역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뜻한다. 그 용어를 긍정하는 행위야말로 스스로 과거를 합리화하고 왜곡된 선전을 펼치고 있는 셈이 된다.
- NHK의 보도 프로그램(〈추억의 섬追憶の島〉)은 세계유산의 해석이 깊이 있는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부정적 유산까지 포함해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엇갈린 두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곧 편향은 찾아볼 수 없는 만큼 방송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NHK의 보도 내용을 ‘국익’이라는 미명 아래 비판하는 듯한 방향에는 문제가 있다.
- 각 시설에서 자행된 전시 강제노동을 ‘부정적 역사’로 문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시마에서의 생활과 노동을 깡그리 ‘부정적 역사’로 간주하고 있는 듯 슬쩍 바꾸고는 비난하고 있다. 부정적 역사의 고찰을 도외시하는 단편적인 대응이다. 도민을 가해자로 보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노동의 존재를 도민을 가해자로 모는 도구인 양 둔갑시켜 하시마 도민에 대한 인권 침해로 슬쩍 바꿔치기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반대로 피해국과의 분단 및 대립을 낳고 있다.
- 강제노동 문제를 조사 연구하는 행위가 결코 반일도 정치적 활동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낙인을 찍어 주장을 배제하는 기술을 하고 있다. 진상 규명은 ‘역사 전쟁’이 아니라 자료에 의거해 진실을 제시하는 것이다. 가토의 기술에서는 관용이 느껴지지 않는다.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으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간주하고 있다. 강제 동원된 사람들의 시선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가토가 선전하는 메이지 산업화의 정의 서술은 국제협력을 내걸고 지적, 정신적 연대를 추구하는 유네스코의 정신에 반한다.

산업유산정보센터의 개관 이후, 이 센터는 전쟁 중의 강제노동을 전시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곳이 아니며, 또 가토 센터장은 언행 등에서 볼 때 공적 시설의 관리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사실 등이 명백해졌다. 보전위원회·워킹그룹의 규

약 등에 가토나 국민회의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다는 사실은 공적 조직의 사유화를 보여준다. 조직의 사유화 해소, 전시 개선, 센터장 경질을 요구한다. 일본정부는 국제회의에서의 발언을 실천하고 유네스코의 정신과 부합하는 전시를 마련하여야 한다. 산업유산국민회의의 위탁 운영을 중지하고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강제노동과 차별의 실태를 제시하고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전시로 바꾸어야 한다.

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展示・強制労働

竹内康人

1. 官邸主導による世界遺産登録・「アベ案件」

官邸主導による明治日本産業革命遺産の登録

推進する加藤康子の父は故加藤六月、安倍氏は加藤氏の友人、その活動に理解。

2012年末、安倍内閣（第2次）成立、

2013年3月、内閣官房に「有識者会議」、その下に産業プロジェクトチーム、加藤コーディネーター、同年9月、産業遺産国民会議（一般財団法人）設立（設立人加藤康子、専務理事へ）

2014年4月、元ユネスコ大使の木曾功、内閣官房参与に任命、

2015年7月、ユネスコ世界遺産委員会の直前、加藤が内閣官房参与へ（～2019年7月末）、佐藤地ユネスコ日本大使、和泉洋人・木曾功らと、7月の世界遺産委員会での登録にむけて活動

2015年、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保全委員会(木曾が会長・加藤が副会長)、同委員会インタープリテーションワーキンググループ(加藤が座長)会議の開催

登録の際の日本政府発言

7月5日の登録の際、日本政府は、「日本は、1940年代にいくつかのサイトにおいて、その意思に反して連れて来られ（brought against their will）、厳しい環境の下で働かされた（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多くの朝鮮半島出身者等がいたこと、また、第二次世界大戦中に日本政府としても徴用政

策を実施していたことについて理解できるような措置を講じる所存である」、
「日本は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の設置など、犠牲者を記憶にとどめるために適切な措置を説明戦略に盛り込む所存である」（日本政府訳）と発言。

その後、日本政府は「forced to work」は「働かされた」であり、「強制労働の意ではない」、「戦時の朝鮮半島出身者の徴用は、国際法上の強制労働にあたらぬ」とした。

日本政府は朝鮮半島出身者が意に反して徴用されたこともあったが、違法な強制労働ではなかったという認識を示す。

2. 「犠牲者を記憶にとどめるために適切な措置」のない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

加藤康子を通じての内閣官房と国民会議の結託・利益誘導

加藤康子産業遺産国民会議専務理事が内閣官房参与へ(2015年7月～2019年7月末)

調査・研究・委託運営は、政府から国民会議へ

産業遺産国民会議による強制労働の否定～「軍艦島は地獄島ではありません」
産業遺産国民会議「世界遺産・軍艦島は地獄島ではありません」と訴える映像をウェブサイト（真実の歴史を追求する端島島民の会の応援ページ）に掲載。

国民会議は「軍艦島の真実」というウェブサイトも運営

「軍艦島は私たちの故郷です。地獄島ではありません」

「ねじ曲げられた歴史の宣伝に私たちが屈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

日本人と朝鮮人は一緒に働いた、景気がよく家族連れで来ていた、みんな友達で差別したことはない、（元端島島民の発言）。

戦時中に強制連行され、ひどい虐待を受け、人権を蹂躪されたと主張する人々がいるが、その多くは事実とことなる証言や証拠によるもの。強制連行や虐待はねつ造などと主張

世界遺産登録による観光地化と元端島島民の郷愁をもとに自らに都合のよい歴史の物語

歴史を批判的にみて、被害者の側に立って考える、歴史から人権と平和の教訓をえるという姿勢がない。

内閣官房から産業遺産国民会議への調査委託

2016年度「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産業労働に係る調査 8964万円

2017年度「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産業労働に係る調査 1億4580万円

2018年度「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インタープリテーション更新に係る調査研究 1億2508万4520円

2019年度「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各サイトの歴史全体におけるインタープリテーションに係る調査研究 1億3299万円

2020年度 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の運営開始に向けた調査研究 1210万円

2020年度 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における普及啓発広報等委託業務 4億3010万円
合計で9億3571万4520円

ここでは、強制労働を否定する資料や証言も収集、情報公開では報告書の人名などは黒塗り

産業遺産国民会議が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の委託運営へ、センター長は加藤康子

加藤は、「稼働資産を含む産業遺産に関する有識者会議」(2012)の委員、国民会議(2013)の専務理事、内閣官房参与(2015)となり、明治産業革命遺産の登録をすすめる。

また、加藤は「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の保全委員会」(2015)副会長、その下の「インタープリテーションワーキンググループ」(2015)の座長。

委員会規約「委員会に副会長を置き、加藤康子委員がこれを務める」(第3条の6)、ワーキンググループ設置要綱「ワーキンググループに座長を置き、加藤康子委員がこれを務める」(第2条の2)。内閣官房からの人物として加藤の名前が規約や要綱に当初から明記。「インタープリテーションの推進について、一般財団法人産業遺産国民会議の助言を受ける」(同設置要綱第2条の6)とも記載。

内閣官房の有識者会議の委員として、保全委員会やワーキンググループで実権。加藤氏の意向、利益が保全委員会、ワーキンググループに反映、具体的な事業は国民会議に委託

内閣府・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設立の経過

2017年11月「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の在り方等について 第一次報告書」の「はじめに」

「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が世界文化遺産に登録された際、世界遺産委員会の決議において、「歴史全体についても理解できるインタープリテーション（展示）戦略」を策定するよう勧告がなされ、日本政府は、韓国政府との外交交渉を踏まえ、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の設置などの適切な措置を当該戦略に盛り込む旨発言した。このような背景から、日本政府は「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を設置することとし、その在り方等について検討するため本検討会が設置

ここでは「犠牲者を記憶にとどめるため」という文言が欠落

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展示の内容

2020年3月、開所

内閣官房に産業遺産の世界遺産登録推進室、内閣府に地方創生推進事務局（2016年～）

〔内閣官房が基本方針を企画立案、内閣府がその方針をふまえて具体的に企画立案〕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1階は「導入展示、メイン展示、資料室」の3つの展示「ゾーン」。

ゾーン1は「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の概要、「世界遺産に登録されるまでの道のり」、

ゾーン2は「幕末から明治にかけてわずか半世紀で産業国家へと成長していったプロセス」

「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の世界遺産価値並びに23の構成資産の世界遺産価値への貢献や構成資産の「歴史全体について展示」

ゾーン3は資料室、「第二次世界大戦中の事業現場における産業労働に関わる出典の明らかな一次史料、二次史料並びに証言を多数紹介」。

2階は、事務スペースのほか、収集した資料を保管する資料収蔵庫、研修室などで構成。

「インタープリテーション戦略の実施状況についての報告」（内閣官房2020年）（以下、P17～）

（3）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等を含む労働者に関する情報収集

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等を含む労働者の戦前・戦中・戦後の産業労働に関する調査として、一次史料、口頭証言、出版物などの調査を実施した。

産業労働に関して、論文、賃金などのデータ、裁判資料などの資料を収集、産業遺産・産業考古学に関する海外有識者から産業労働に関する海外事例の情報を収集、行政機関による調査、新聞記事等から端島炭坑における主な出来事を調査するとともに、採炭の現場である坑内の様子を有識者の協力のもとで調査、産業労働に関する現場の様子や環境、雰囲気等を正確に理解するため、有識者による戦前から戦後にかけての新聞報道を中心とした資料の分析、炭坑における産業労働等に関する情報収集のため、当時の様子を経験する炭坑労働経験者等からの聞き取り調査を行った。〔引用註、強制労働否定資料の収集〕

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

第二次世界大戦中に日本政府が徴用政策を実施していたことが理解できるよう、徴用政策の根拠となった法令等をパネル化して展示。〔引用註、動員を正当化〕。当時、日本人も朝鮮半島出身者等も同様に厳しい環境の下で働いていた状況が理解できるよう、資料（証言映像を含む）を展示。〔引用註、差別の否定〕。書架には、産業労働を含む産業遺産全般に関するものなど、幅広く開架。モニターでは、当時の労働や暮らしについてのインタビュー証言映像を閲覧可能。併せて、証言内容や日記の一部をパネル化して展示。〔引用註、端島元島民の証言を編集し、強制労働否定、差別否定の口述〕。

3. 強制労働を否定する「ゾーン3資料室」

ゾーン3には、元端島島民の顔写真が並ぶ、明治期の証言者ではない。

「国内外の産業遺産全般、産業労働、徴用政策に関して書かれたものも含めて幅広く開架」。「中には朝鮮半島出身の徴用された労働者の手記、戦時中の事業現場で朝鮮半島出身者や中国人捕虜と共に働いた日本人の日記や史料が開

架」(P32~)

元端島島民の手記 [強制労働を否定]、

鈴木文雄(金文道)証言、父が端島で働き「伍長」の地位、[戦時中、事故が増え、端島から転出]

東洋工業動員朝鮮人の韓国語手記、鄭忠海『朝鮮人徴用工の手記』

三池炭鉱職員、青谷昭二の冊子類 [強制連行を否定する内容]、

長崎造船に戦時徴用された在留台湾出身者の給与袋など[差別なく給与支給された事例]

右派は鄭忠海『朝鮮人徴用工の手記』を高い賃金、恋愛などの記載をあげ、強制労働否定に利用している。しかし読めば、強制動員の悲哀を「日本に強制的に連れて行かれ、苦役に従事した我々同胞が続々帰国」などと記述しているものであり、強制連行の証言記録である。情報センターは韓国語の記事や日本語訳本を読むことなく、強制否定の書とみなしている。

また、パネル「徴用関係文書を紐解く」では、官斡旋、徴用の資料が提示されているが、1939年からの集団募集の動員文書が欠落している。

「その意思に反して連れて来られ、厳しい環境の下で働かされた」は「産業労働」へ。徴用は正当であり、強制労働も差別もないという展示。「犠牲者を記憶にとどめるため」の展示は反故。

4. 訪問者の個人情報暴露するという情報センター長の資質

加藤康子「韓国が早速クレーム「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Hanada」2020.9)、「記者か、活動家か 朝日、毎日が目の敵にする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同 2020.10)、「取材を受けた当事者が告発 NHK「軍艦島ドキュメント」偏向の手口」(同 2021.1)、以上、執筆肩書は産業遺産国民会議専務理事。「軍艦島 戦時“徴用工”問題歪曲報道NHKは平気でウソをつく」(加藤康子・有馬哲夫、「WILL」2021.1)、肩書は元内閣官房参与・産業遺産情

報センター長、などの記事を出す。

これらの記事で、加藤は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を訪問した記者や市民の実名とその発言内容をあげ、批難。その内容は次のようなものである。

- [70人強の端島民への取材では]「端島において韓国側の主張するような、いわゆる奴隷労働の証拠や証言は見つかりません」。「韓国の強制労働の宣伝に抗議すべきであり」「日本政府は紳士ズラし過ぎていると思います」「日本政府にはプロパガンダにきちんと反論してもらいたい」。「いまは私一人で日本の一部マスコミ、韓国のプロパガンダに反論しており、政府は及び腰です」[情報センターは]「粛々と元島民の証言や一次史料を収集、展示し、「真実」を発信して参ります」。
- [誤認や歪曲があれば修正するものであり]「私は、歴史修正主義を悪いことだと思っておりません」。「市民運動の矢野氏との対話から」「私には、矢野氏が何か隠しているように見えました」。「この歴史戦は、政府がきちんとおカネをかけて、毅然と1次資料や元島民の証言などの「ファクト」を発信していけば、矢野氏のプロパガンダに負けることはありません」。
- 「島民たちは戦時中の端島で、働く人も物資も不足するなか、全山一家でお互い助け合いながら、石炭を掘り、職場と一体になった生活環境で暮らしてきた様子を語っています」。「仲良しのコミュニティの証言は全体像を示してはおらず信憑性を欠いている」と一方的に彼らの証言を疑い、加害者扱いをすることこそ、端島島民への差別であり偏見です。「この炭鉱コミュニティでは、戦前、戦中、戦後を通し、いかなる時代にあっても、出身はともかくとして、全山一家で、苦しいことも悲しいことも嬉しいこともすべて分かち合い、泣いて笑ってお醤油を貸し借りしながら、一緒のお風呂に入りながら、支え合い、懸命に生きてきました」。「活動家まがいのメディア人たちに聞きたい。無実の島民たちを加害者扱いにすることに「良心の呵責はないのか」と」
- [NHKの番組「実感ドドド！追憶の島～ゆるる“歴史継承”～」で]「歴史研究者となっていますが、その実、バリバリの活動家なのです。しかし、竹内氏がそういった反日的な活動をしてきた人物ということを知るとNHKは一

切伝えません」。「番組は、「軍艦島の世界遺産価値は負の歴史にあるのだ」という強い固定観念を前提に制作されており、韓国政府の主張そのものです」、「韓国の主張に寄り添った報道を行い、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の展示戦略や端島元島民の声を棄損する報道を行うことで、政治的に踏み込んでいます。これは放送法第四条「政治的公平性」を逸脱してい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今回、林えいだい氏や竹内氏などの主張をNHKが放映することで、根拠薄弱な情報が「既成事実化」してしまいました」「国民の受信料で運営されているNHKが、このような国益を損なう偏向番組をつくるなど、断じて許さ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

- 「労働 = 影、労働 = マイナスというふう捉えるのは短絡的だと思います」「炭鉱に入っている人たちも誇りを持って」「私にとってみたら「正」ですよ」「誇りをもって作業着をきているんだから、負の歴史なんて言わないでもらいたい」。「炭鉱労働を負ときめつけて「負の遺産だ」と議論するのは差別以外の何物でもありません」。「彼らの人生をすべて負か正かという短絡的な議論で色分けできるのでしょうか。一握りの「いわゆる被害者」証言だけを鵜呑みにし、真偽も確かめず、加害者と被害者の烙印を押して島民を分断し、被害者以外の声が語る端島での暮らしの記憶のすべてを切り捨てるのは乱暴かつ傲慢な対応としかいいようがありません」。

5. 公的施設にふさわしい展示と管理者を

記事への批判

- 公的な展示施設のセンター長として知りえた個人情報を雑誌でその個人の了解もなく記している。またその個人の活動内容は伝聞によるもので、その記述には間違いがある。センター長として資質が問われる。訪問者への録画撮りなどでの対応や決めつける文体は、危機意識の表れ、不寛容、頑迷さを示すもの。国税で運営される内閣府の展示施設の委託管理者の自覚に欠ける。センター長は内閣府の機関を代表する立場にあり、来館者の主権者国民や外国籍市民に敬意を示す姿勢が必要である。また、様々な意見

を受け止める姿勢が必要である。しかし現在の対応は、批判する者を「反日メディア」「反日活動家」などと宣伝する。それはセンターの展示を私物化するような対応である。

- 動員された朝鮮人の証言については、間違いを指摘し、根拠薄弱とするが、端島の島民の子どもの頃や伝聞による証言への検証はなされず、資料として利用している。歴史修正主義の用語について肯定的に語っているが、その語は歴史を意図的に歪曲し、否定する行為を示すものである。その語を肯定することは、自らが過去を合理化し、歪曲した宣伝を行っていることになる。
- NHKの報道番組（「追憶の島」）は、世界遺産の説明で深みのある内容を持つには、負の遺産を含めて表現することではないかという問題意識によるものであり、両論を示しており、偏向はなく、放送法違反などにはあたらぬ。NHKの報道内容を「国益」の名で批判するような志向に問題がある。
- 各施設での戦時の強制労働を「負の歴史」として問題にしているのに、端島での生活・労働全般を「負の歴史」とみているとすり替え、批難している。負の歴史を考察しようとし、短絡的な対応である。島民を加害者としていないのに、強制労働の存在は島民を加害者とするものとし、端島島民への人権侵害へとすり替える。そのような行為が逆に被害国との分断・対立を生む。
- 強制労働問題を調査研究することは、反日でも、活動家でもないが、レッテルを張りつけて主張を排除する記述になっている。真相究明は「歴史戦」などではなく、資料に依拠して真実を示すことである。加藤の記述には寛容性が感じられない。過去への反省がなく、自らを被害者とみなす行動。動員を強要された人々の視点から見つめるべき。加藤が宣伝する明治の産業化の正義の物語は、国際協調を掲げ、知的精神的連帯を求めるユネスコに反するもの。

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開館により、このセンターの展示が戦時の強制労働と犠牲者の追悼のないものであり、加藤センター長の言動が公的施設管理者として

の資質に欠けることなどが明らかになった。保全委員会・ワーキンググループの規約などに加藤や国民会議の名が明記され、公的組織の私物化もわかる。組織の私物化の解消、展示の改善、センター長更迭が求められる。日本政府は国際会議での発言を実行し、ユネスコの精神の合致するような展示をおこなうべきである。産業遺産国民会議による委託運営は中止し、政府が直接運営する方向をとること、強制労働や差別の実態を示し、「犠牲者を記憶にとどめるため」の展示とすることが求められる。

| 제4발표 |

내각부·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 개선과 산업유산국민회의에 의한 센터 운영 위탁 중지를 요구하는 요청서

고바야시 히사토모

(小林久公,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내각총리대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님

내각부·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 개선과 산업유산국민회의에 의한 센터 운영 위탁 중지 등을 요구하는 요청서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공동 대표 안자코 유카(庵澄由香) 히다 유리치(飛田雄一)

1. 산업유산국민회의에 의한 정보센터 전시 및 운영은 설치 목적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산업유산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는 2015년 7월5일에 ‘메이지일본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이루어진 일본 정부 대표단의 발언을 토대로 설치되었습니다. 당시 대표단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코모스(ICOMOS)의 권고를 존중하며], 특히 ‘해석 전략(interpretive strategy)’을 책정할 때는 ‘각 시설(site)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전략을 책정할 것’이라는 권고에 진지하게 대응하겠다”. “더 구체적으로 일본은 1940년대에 몇몇 시설(site)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끌려와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로 노역한 많은 한반도 출신자들이 있었으며, 또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생각이다.” “일본은 인포메이션센터의 설치 등,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담을 생각이다.”

이 발언을 토대로 정보센터는 2020년 3월에 설치되어 6월부터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정보센터는 이 “인포메이션센터”에 해당하는 만큼, “의사에 반하여 끌려와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로 노역한 많은 한반도 출신자들”의 전시와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터였습니다. 이곳의 운영 및 전시는 산업유산국

민회의(이하 “국민회의”)에 위탁되었습니다만, 전시는 전쟁 중의 강제노동을 부정하고 있으며 희생자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와 체결한 「산업유산정보센터의 보급 계몽 홍보 등 위탁 업무의 위탁 계약」 중 “권고 사항에 착실하게 대응한다”는 기술에 반하는 행태입니다.

2. 산업유산국민회의는 국가의 조사 위탁 사업에서 충분히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자기자본을 증식하고 있습니다.

국민회의는 2016년도부터 4년간,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둘러싼 산업 노동과 해석(Interpretation)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해 총 4억 9351만 엔, 2020년도 정보센터 운영 위탁 비용으로 4억 3천만 엔 등, 정부로부터 총 9억 3571만 엔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자기자본이 1억 엔 증식하고 있습니다.

국민회의는 수탁한 조사 연구에서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논문과 인터뷰 기록 등을 수집하는 한편, 강제동원 피해자의 기록은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또 유네스코가 요구한 ‘전체 역사(full history)’에 관한 조사 및 분석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산업 발전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역사도 충분히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조사 위탁 성과 보고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정보공개 청구에 주요 부분을 먹칠한 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불성실한 행위로 계약 상대방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국가의 산업유산국민회의에 대한 위탁은 공공기관의 사유화에 의한 이해충돌 행위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가토 고코(加藤康子) 국민회의 전무이사는 내각관방 참여를 역임했습니다. 또 내각관방 참여를 사임한 후에도 계속해서 ‘가동 자산을 포함한 산업유산에 관한 유식자(전문가)회의’ 위원, ‘메이지일본 산업혁명 유산 보전위원

회’ 부회장, 그 산하의 ‘인터프리테이션 워킹그룹’(이하 “WG”)의 좌장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 WG의 설치요강에는 가토 전무이사가 좌장으로 명기되어(설치요강 2조 2) 있으며, 인터프리테이션(해석) 추진 시에는 “산업유산국민회의의 조언을 받는다”(설치요강 2조 6)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토 전무이사와 산업유산국민회의가 해석 추진에서 핵심 역할을 하도록 짜여 있는 셈입니다. 그를 통해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역사 인식을 가진 가토 전무이사와 그 단체에 이익이 유도되었고, 국가의 시설을 활용해 일방적인 역사 인식이 선전되고 있습니다. 국민회의 전무이사이면서 내각관방 참여, 보전위원회 부회장, WG 좌장의 자리에 앉은 가토의 의향이 반영되면서 공공 조직이 사유물로 전락하였고, 국민회의에 업무가 위탁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위탁은 이해충돌 행위입니다.

4. 가토 고코 센터장은 공적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할 만한 자질이 없습니다.

가토 센터장은 공적 시설인 센터의 장으로서 알게 된 견학자의 개인정보를 산업유산국민회의 전무이사이라는 직함으로 잡지(월간 《Hanada》 2020년 9월호 등)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곧 개인정보의 비밀유지의무를 무시하고 특정 신문사 및 개인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의 진상 규명 활동을 ‘반일’이라고 중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자로서 부족한 자질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5. 산업유산국민회의는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왔습니다.

산업유산국민회의는 재단 설립 초기부터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결산 공고를 게을리하였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과태료의 대상입니다. 시민 단체들이 수차례 지적한 후에야 간신히 작년 10월에 과거 7년치 결산을 관보에 공고하였습니다. 국민회의는 법에 반하는 행태를 이어온 셈입니다.

6. 허위 기재와 법률 위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유산국민회의의 현 사무소(도쿄도 나카노구(東京都中野区))에 전화하면 직원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곳은 등기부에 등기된 주소가 아닙니다. 저희 단체가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2020년 9월 5일에 산업유산국민회의의 등기부상 주소(도쿄도 주오구 니혼바시 가야바초(東京都中央区日本橋茅場町) 3-2-10)에 보낸 우편 서류는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주요 사무소가 장기간에 걸쳐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입니다. 등기법 위반과 계약서의 허위 기재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7. 국민회의에 의한 위탁 업무는 고의에 의한 용역의 조잡, 부정에 대하여 그 능력이 없습니다.

「예산 결산 및 회계령」(1947년 칙령 제165호)은 국가의 입찰 자격과 관련하여 “일반 경쟁에 참가시킬 수 없는 자”로 “당해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는 자”라고 정하고 있으며, 또 “일반 경쟁에 참가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자”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공사, 제조 기타 용역을 조잡하게 하거나 물건의 품질 혹은 수량에 관하여 부정 행위를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회의는 동원 피해자의 자료를 수집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제노동의 부정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의사에 반하여 끌려와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로 노역한 많은 한반도 출신자들”을 전시하지 않고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시는 세계위원회 석상에서 발언한 국제 약속에 반할 뿐 더러 “권고 사항에 착실하게 대응하겠다”는 수탁 계약에도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국민회의는 「예산 결산 및 회계령」 중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는 자”에 해당하며, 일방적인 전시는 “고의로” “용역을 조잡하게 한” 대목에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 센터장이 잡지에서 개인정보를 폭로한 행위 및 증상은 위탁계약의 ‘부정 행위’에 해당합니다.

「예산 결산 및 회계령」에 따라 내각관방·내각부가 정한 「물품 등의 계약과 관련한 지명 정지 등 조치 요령」의 별표 2는 “허위 기재”, “계약 기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국민회의의 현 허위 기재 및 법률 위반은 지명 정지 조치에도 해당합니다.

이렇듯 국민회의의 불성실한 실패는 국가의 계약 상대방으로서 부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국가가 산업유산국민회의에 계속해서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입찰에서 배제하고 위탁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이하를 요청합니다.

1. 정보센터의 산업유산국민회의 운영 위탁을 중지할 것
2. ‘부정·불성실’한 행위를 지속 중인 산업유산국민회의를 입찰에서 배제하고 지명 정지를 할 것
3. 정보센터의 전시에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로 노역한 많은 한반도 출신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시하고,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의 장으로 만들 것. 그리고 전시를 개선할 때까지 폐관할 것
4. 향후 전시, 운영, 관리는 정부가 관할하거나 대학 등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기관에 위탁할 것
5. 가토 정보센터장에게 개인정보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사죄하게 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

内閣総理大臣 菅義偉 様

内閣府・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の展示の改善と 産業遺産国民会議によるセンターの運営委託の 中止などを求める要請書

強制動員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
共同代表 庵途由香 飛田雄一

1. 産業遺産国民会議による情報センターでの展示・運営は設置目的 に反するものです

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以下、情報センター)は、2015年7月5日の「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の世界遺産登録時の日本政府代表団の発言に基づいて設置されました。その発言は次のものでした。「〔イコモス勧告を尊重し〕特に、『説明戦略』の策定に際しては、『各サイトの歴史全体について理解できる戦略とすること』との勧告に対し、真摯に対応する」。「より具体的には、日本は、1940年代にいくつかのサイトにおいて、その意思に反して連れて来られ、厳しい環境の下で働かされた多くの朝鮮半島出身者等がいたこと、また、第二次世界大戦中に日本政府としても徴用政策を実施していたことについて理解できるような措置を講じる所存である。」「日本は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の設置など、犠牲者を記憶にとどめるために適切な措置を説明戦略に盛り込む所存である。」

この発言をもとに、情報センターは2020年3月に設置され、6月から一般公開されました。情報センターはこの「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にあたり、

「意思に反して連れて来られ、厳しい環境の下で働かされた多くの朝鮮半島出身者等」の展示や「犠牲者を記憶にとどめるために適切な措置」がなされるはずでした。この運営・展示は、産業遺産国民会議(以下、国民会議)に委託されましたが、その展示は、戦時の強制労働を否定するものとなり、犠牲者を記憶にとどめるものにはなっていません。それは、国との「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における普及啓発広報等委託業務の委託契約」での「勧告事項への対応を着実に行う」という記載に反するものです。

2. 産業遺産国民会議は国の調査委託で十分な調査を実施せず、自己 資本を増殖しています

国民会議は2016年度から4年間にわたり、明治産業革命遺産に係る産業労働やインタープリテーションに関する調査・研究で計4億9351万円、2020年度の情報センターの運営委託で4億3千万円など、総額で9億3571万円を政府から得ています。その結果、1億円の自己資本を増殖しています。

国民会議が受託した調査研究では、強制労働を否定する論文やインタビュー記録などを収集し、強制動員された被害者の記録は収集されていません。ユネスコの求める「全体の歴史」に関する調査・分析として不十分なものです。また、産業発展の過程で犠牲となった人々の歴史についても十分な調査がなされていません。この調査委託の成果報告について、国は情報公開請求に対して主要部分を黒塗りでしか公開していませんが、このような調査は国際的な約束を履行しない不誠実なものであり、契約相手方として不相当であることを示すものです。

3. 産業遺産国民会議への国の委託は、公共機関の私物化による利益 相反行為です。

2015年から2019年まで国民会議の加藤康子専務理事は内閣官房参与を務め

ていました。また、内閣参与を辞職してからも引き続き「稼働資産を含む産業遺産に関する有識者会議」委員、「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の保全委員会」副会長、その下にある「インタープリテーションワーキンググループ」(以下、WG)の座長の任についています。このWGの設置要綱では、加藤氏が座長と明記され(設置要綱2条2)、インタープリテーションの推進では「産業遺産国民会議の助言を受ける」(同2条6)と記されています。

加藤氏と産業遺産国民会議がインタープリテーションの推進の中心的役割を果たすように仕組まれているのです。それにより、強制労働を否定する歴史認識を持つ加藤氏とその団体に利益が誘導され、国の施設を使っての一方的な歴史認識の宣伝がなされています。国民会議専務理事であり、内閣官房参与、保全委員会副会長、WG座長の地位にある加藤氏の意向が反映され、公共組織が私物化され、国民会議へと業務委託がなされていたのです。そのような委託は利益相反行為です。

4. 加藤康子センター長は公的施設管理業務を行う資質を有してはいません

加藤センター長は公的施設であるセンター長として知り得た見学者の個人情報や産業遺産国民会議専務理事の名で雑誌(月刊Hanada2020年9月号など)に掲載しています。そこでは個人情報の守秘義務を無視し、特定の新聞社や個人の行動を非難しています。強制動員の真相究明の活動を「反日」と中傷しています。それは管理者としての資質に欠ける姿を示すものです。

5. 産業遺産国民会議は「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する法律」に違反してきました

産業遺産国民会議は、財団設立時から、「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する法律」に定められた決算の公告を怠っていました。それは過料の対象となる

ものです。市民団体から再三指摘を受け、ようやく昨年10月に過去7年分の決算を官報に公告しました。国民会議は法に反する状態を続けてきたのです。

6. 虚偽記載と法律違反は現在も続いています

産業遺産国民会議の現在の事務所(東京都中野区)に電話をかけると職員が出ます。そこは登記簿に登録されている住所ではありません。私たちが弁護士に依頼して2020年9月5日に産業遺産国民会議の登記簿上の住所(東京都中央区日本橋萱場町三丁目2番10号)に出した郵送文書は、宛所不明で返送されてきました。主たる事務所が長期にわたり移転しているにも関わらず、現時点でも、移転登記をしていません。登記法違反と契約書の虚偽記載の状態が続いているのです。

7. 国民会議による委託業務は、故意による役務の粗雑、不正にあたり、その能力を有していません。

「予算決算及び会計令」(1947年勅令第165号)では、国の入札資格として「一般競争に参加させることができない者」を「当該契約を締結する能力を有しない者」とし、「一般競争に参加させないことができる者」としては、「契約の履行に当たり故意に工事、製造その他の役務を粗雑に行い、又は物件の品質若しくは数量に関して不正の行為をしたとき」と規定しています。

国民会議は、動員被害者の資料収集を行わずに、一方的に強制労働の否定を宣伝しています。「意思に反して連れて来られ、厳しい環境の下で働かされた多くの朝鮮半島出身者等」を示さず、「犠牲者を記憶にとどめるために適切な措置」についても示さないわけですから、展示は世界委員会での国際約束に反するものです。それは、「勧告事項への対応を着実に行う」とする受託契約にも反する行為なのです。

このようにみれば、国民会議は、「予算決算及び会計令」での「契約を締結

する能力を有しない者」にあたり、一方的な展示は、「故意による」「役務の粗雑」にあたります。センター長による雑誌での個人情報の暴露や中傷は委託契約での「不正の行為」にあたります。

「予算決算及び会計令」に基づいて内閣官房・内閣府が定める「物品等の契約に係る指名停止等措置要領」の別表2には「虚偽記載」、「契約違反」があります。現状での国民会議の虚偽記載と法律違反は指名停止の措置にもあたります。

このように国民会議の不誠実な実態は、国の契約相手方としては不適當です。産業遺産国民会議に国の委託が続けられることは適切ではありません。国の入札からは排除し、委託は中止すべきです。

よって、以下を要請します

1. 産業遺産国民会議への情報センターの運営委託を中止すること
2. 「不正・不誠実」な行為を続ける産業遺産国民会議を入札から排除し、指名停止とすること
3. 情報センターの展示に「厳しい環境の下で働かされた多くの朝鮮半島出身者等がいたこと」を示し、「犠牲者を記憶にとどめるために適切な措置」の場とすること、その展示を改善するまで、閉館すること
4. 今後の展示、運営、管理については政府の直轄、あるいは大学等の信頼できる研究機関に委託すること
5. 加藤情報センター長に対し、個人情報の守秘義務違反を謝罪させ、再発防止策をとること

※本文書到着後、2週間以内にこの要請に対する考え方を文書でご回答をお願いします。

| 제5발표 |

일본 근대산업유산 관련 교재 제작 및 가이드 연수 사업에 관한 분석

노기 가오리

(野木香里, 민족문제연구소)

일본 근대산업유산 관련 교재 제작 및 가이드 연수 사업에 관한 분석

노기 가오리(野木香里, 민족문제연구소)

1.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 제4항 f호 권고사항의 이행

2015년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 제4항 f호는 ‘일관된 관점에서의 인재 육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2017년 11월 30일 일본 내각관방이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일본 근대산업유산(정식명칭: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철강, 조선 및 탄광)의 『이행경과보고서(State of Conservation Report)』를 보면, ‘인재’를 4가지 유형¹⁾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필요한 능력과 육성 항목, 사업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④ 구성 자산 현지에서 항상적으로 안내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의 23개 구성 자산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 속에서 해당 구성 자산의 위치(positioning)와 특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성 자산의 소유자 및 관리 책임자의 지도하에 관람객에게 구성 자산의 설명(해석)을 확실하게 전달할 능력”이 필요하다고 정리하고 있다. 즉 유형 ④의 인재는 일본 근대산업유산의 ‘위치’와 ‘특질’을 관람객들에게 말로써 ‘설명(해석)’하는 역할을 지니는 ‘현지 가이드’로, 그들이 이해해야 할 ‘구성 자산의 특질’과 전달해야 할 ‘구성

1) ① 구성 자산의 소유자·관리 책임자, ② 구성 자산 현지에서 실제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지정관리자 등), ③ 구성 자산 현지에서 일상적인 유지 관리 업무(청소·복원을 포함)에 종사하는 자, ④ 구성 자산 현지에서 항상적으로 안내 업무에 종사하는 자.

자산의 설명'은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 제4항 g호에서 언급된 “각 사이트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해석전략” 및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했다는 것을 언급한 일본의 약속과도 깊이 연관돼 있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이행경과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도 인재 육성 사업은 ‘㉠ 인재 육성을 위한 교재 제작’과 ‘㉡ 현지 가이드 연수 개최’로 구성되었다.

㉠ 인재 육성을 위한 교재 제작

- 인재 육성을 위한 교재는 다음 세 가지를 제작한다.

- ㉠ 일본 근대산업유산의 세계유산으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각 구성 자산의 공헌·위치 등을 중심으로 자산 전체와 그 구성 자산의 보전 및 해석에 관한 내용 등을 망라해서 게재한 교재(2017년 12월 완성 예정)
- ㉡ 전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재(2017년 10월 완성)
- ㉢ 제철·제강, 조선, 석탄산업의 사업사(事業史)를 배울 수 있는 교재(먼저 ‘제철·제강’에 관한 교재가 2017년 12월 완성 예정)

- 완성된 교재는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지 가이드 연수 개최

- 각 구성 자산의 현지 가이드를 위한 연수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지역 별로 개최한다.

2017년: 10월 가마이시 / 11월 야하타 / 12월 니라야마
 2018년: 1월 하기, 가고시마, 미이케 / 2월 사가, 나가사키

- 연수 프로그램은 교재를 활용한 강의, 일본 근대산업유산 휴대 어플리케이션 조작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인재 육성 사업은 일반재단법인 산업유산국민회의와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세계유산협회의’가 담당했으며, 2017년도 이후 일본 문화청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었다. 문화청 『2017년도 문화유산 종합 활용 추진사업(세계문화유산활성화사업) 실시 계획 일람(平成29年度文化遺産綜合活用推進事業(世界文化遺産活性化事業)實施計畫一覽)』에 따르면,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세계유산협회의’ 사무국을 맡고 있는 가고시마현이 관계 지자체 및 산업유산국민회의와 연계하여 인재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산업유산국민회의가 “각 사업 실시에 대한 지도” 역할을 맡아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인재육성사업 실행위원회’²⁾가 “보조 사업”을 담당하기로 했다.

2. 인재 육성을 위한 교재 제작

2020년 11월 30일 일본 내각관방이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일본 근대산업유산의 『해석전략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Interpretation Strategy)』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의 결과물로 5가지 교재가 제작되었다. 모두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인재육성사업실행위원회’에 의해 발행되었으며, ㉠-3을 제외하고 실물을 확인해 본 결과, ㉠과 ㉡, ㉠-1은 ‘2017년도 문화청 문화예술진흥비 보조금’으로, ㉠-2는 ‘2019년도 문화청 문화예술진흥비 보조금’으로 제작되었다.

2)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세계유산협회의’와 산업유산국민회의로 구성된 단체로, 산업유산국민회의 대표이사 야스다 히로시(保田博)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④ 인재 육성을 위한 교재 제작 상황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제철·제강, 조선, 석탄산업 인터프리테이션·매뉴얼
世界遺産「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ガイドブック石炭編 石炭がわかる本

	④	기획·편집	산업유산국민회의
		발행처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인재육성사업 실행위원회'
		발행일	2017년 10월
		URL	my.ebook5.net/meijiindustrialrevolution/6MR0h5

세계유산에 전달하다.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제철·제강, 조선, 석탄산업 인터프리테이션 교본
世界遺産を伝える。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 製鉄・製鋼, 造船, 石炭産業 インタープリテーション教本

	④	기획	NPO법인 사토야마를 생각하는 모임(里山を考える會)
		발행처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인재육성사업 실행위원회'
		발행일	2017년
		URL	my.ebook5.net/meijiindustrialrevolution/dDm4pR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가이드북 제철·제강편 - 철을 알 수 있는 책
世界遺産「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ガイドブック製鉄・製鋼編 鉄がわかる本

	◎-1	기획·편집	(산업유산국민회의), 稲角忠弘, 菅和彦
		감수	가토 고코 내각관방 산업유산의 세계유산 등록 추진실
		발행처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인재육성사업 실행위원회'
		발행일	2017년 11월
		URL	my.ebook5.net/meijiindustrialrevolution/RBI8at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가이드북 석탄편 - 석탄을 알 수 있는 책
世界遺産「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ガイドブック石炭編 石炭がわかる本

	◎-2	기획	(산업유산국민회의, 석탄에너지센터石炭エネルギーセンター)
		저자	석탄에너지센터
		감수	가토 고코 산업유산국민회의 전무이사
		발행처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인재육성사업 실행위원회'
		발행일	2019년 11월
	URL	my.ebook5.net/meijiindustrialrevolution/UXY3cM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가이드북 조선편 - 배를 알 수 있는 책
世界遺産「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ガイドブック造船編 船がわかる本

	◎-3	기획	산업유산국민회의
		발행처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인재육성사업 실행위원회'
		발행일	2020년 3월
		URL	미공개

④에는 Q28 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의 기간은 1910년까지입니까? Q49 신청서에 노동문제 기재는 있습니까? 등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 제4항 g 호 권고사항 및 일본의 약속을 직접적으로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Q49에서는 "(일본 근대산업유산 등재) 신청서 239쪽에 야마모토사쿠베(山本作兵衛)의 기록 그림 등재에 관한 노동문제 기재가 있습니다. 산업은 사람의 행위이며, 산업혁명으로 인류의 일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산업유산에서는 노동문제에 관한 전시가 필요합니다. 단, 증거에 근거한 역사적 사실을 담담하게 전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재 신청서에서는 탄광 등에서 격증한 노동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죄수 노동을 실시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노동문제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1957년 이후에 제작된 야마모토 사쿠베의 탄광 노동·생활 그림(2011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과 죄수 노동만으로 '노동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1과 ◎-2는 일부 엘리트들과 기술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2에서는 "1875~80년, 다카시마는 출탄량이 최대 23만 톤이라는 전도유망한 탄광이었지만 경영이 쉽지 않았습니다. 난요정갱(南洋井坑)을 새롭게 굴삭(掘削)했지만 가스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홋케이정갱(北溪井坑)이 폐쇄되면서 갱부들의 폭동 등이 잇따르고 경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석탄의 대가로 빚을 갚을 조건으로 미쓰비시에 자금 마련을 부탁했습니다"라며 노동자들의 쟁의가 '폭동'으로 설명되고, 그것도 어디까지나 미쓰비시의 경영 이전 이야기로만 언급되어 있다. 미이케탄광에 대해서도 죄수 노동은 물론 조선인과 중국인 강제노동의 역사는 설명하지 않고 오로지 기술 발전만 강조하고 있다. 한편으로 야마모토 사쿠베의 그림을 소개하면서 "가족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탄광을 구성하는 일원이며, 어려울 때는 이웃 사람들이 서로 도

와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강한 유대감으로 맺어져 있었습니다. 탄광은 함께 산다는 것의 소중함을 알려줍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가족처럼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로 뒤바꾸며 조선인 등 강제노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 제4항 f호와 관련해서 산업유산국민회의 주도로 제작된 인재 육성을 위한 교재(매뉴얼)는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 제4항 g호 권고사항 및 일본의 약속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재는 관계 기관과 현지 가이드, 사이트 매니저들에게 배포되고 있으며, 산업유산국민회의가 운영하고 있는 일본 근대산업유산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공개되고 있다.

3. 현지 가이드 연수

2019년 11월 29일 일본 내각관방이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일본 근대산업유산의 『이행경과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도 ‘㉞ 현지 가이드 연수’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재육성사업실행위원회 주최로 위의 가이드북[인재 육성을 위한 교재] 일부를 교재로 삼아” “구성 자산이 있는 8곳의 관련 시설에서 가이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또 2020년 『해석 전략의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 ‘㉞ 현지 가이드 연수’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실시되었다.

이 중 나가사키의 사례를 살펴보면, 나가사키시에서는 이미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세계유산협의회’가 주최하는 가이드 연수, 나가사키시가 개최하는 근대화 유산에 관한 강좌, 시민과 기업이 개최하는 연수, 나가사키국제관광컨벤션협회가 개최하는 강습회, 하시마탄갱으로 상륙하는 관광선을 운영하는 회사가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가이드 양성 등이 진행되고 있었다(2017년 『이행경과보고서』 부속자료). 다만 이 연수는 시민조직 ‘사루쿠(さるく: 나가사키 사투리로 마을을 산책한다는 뜻) 가이드’ 소속 가이드와 하시마탄갱 상륙 관광선 운영 사업자 소속 가이드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가사키시는 가이드들이 일본 근대산업유산에 대해 충분히 이

㉞ 현지 가이드 연수 개최 상황		
개최일	지역	참가자
2017.10.31.	가마이시	30
2017.11.29.	야하타	54
2017.12.04.	니라야마	28
2017.12.05.	니라야마	22
2018.01.18.	가고시마	46
2018.01.23.	하기	23
2018.01.29.	미이케	52
2018.02.06.	사가	29
2018.02.08.	나가사키	54
2019.12.19.	하기	37
2020.01.15.	미이케	62
2020.01.16.	야하타	48
2020.01.23.	가고시마	38
2020.01.29.	사가	34
2020.01.31.	나가사키	47
2020.02.13.	니라야마	34
2020.02.25.	가마이시	40



해하고 안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다.³⁾

나가사키에서는 2018년 2월 8일에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인재육성사업 실행위원회’가 주최한 ‘㉞ 현지 가이드 연수’가 열렸다. 나가사키시 문서에 따르면 고스케수선장 가이드, 다카시마탄갱 가이드, 하시마탄갱 가이드, 미쓰비시 나가사키조선소 가이드, ‘사루쿠 가이드’에게 안내장을 송부했다. 프로그램은 가토 고코 내각관방참여(당시)와 ㉞-2의 저자인 석탄에너지센터 관계자의 강연, ㉞의 기획 단체 관계자와 산업유산국민회의 관계자(공식 어플리케이션 설명)가 진행하는 연수 등으로 구성되었다. 2019년 『이행경과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2월 8일 하루 54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나가사키시 문서에 따르면 신청자가 100여 명에 달해 2월 8일 연수는 추첨을 통해 진행했으며, 별도로 산업유산국민회의에 위탁해 2월 8일에 참여하지 못한 가이드를 우선으로 3월 15일 2차 연수를 개최했다. 산업유산국민회의가 작성한

『2017년도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가이드 연수 사업 완료 보고』(2018.3.20, 나가사키시 소장)를 보면, 가토 고코 내각관방참여(당시)를 비롯해 교재 제작 관계자를 주요 강사로 하는 등 2월 8일 연수와 거의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이행경과보고서』 등에서는 누락되어 있지만, 미쓰비시중공 나가사키조선소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가이드를 양성하고 있다.

2018년 3월 15일 나가사키시에서 진행된 현지 가이드 연수 개요			
주최	나가사키시	운영	산업유산국민회의
일시	2018년 3월 15일(목) 10:00~17:00	장소	나가사키현농협회관
참가자	50명: '사루쿠 가이드', 고스계수선장 가이드, 다카시마해상교통, 다카시마자치연합회, 군함도컨서터지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테이션: 아미오카 겐지(網岡健司, 신일본제철 야하타제철소 근무, 산업유산국민회의 어드바이저, 사토야마를 생각하는 모임 이사) - 강의(세계유산 가치): 가토 고코(내각관방참여) - 강의(산업 별 전문가): 가마타 준이치(鎌田淳一, 석탄에너지센터) - 연수(전달 방법): 무카이 고타(向井侯太, 사토야마를 생각하는 모임) - 연수(어플리케이션 소개): 오가와 준(小川淳, 산업유산국민회의) 		

2018년 나가사키시에서 두 번에 걸쳐 열린 ‘㉔ 현지 가이드 연수’ 프로그램과 배포 자료, 참가자들의 설문지 등을 확인해 본 결과,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 제4항 g호 권고사항 및 일본의 약속 내용과 관련한 내용을 찾지 못했다. 2017년 이후 매년 진행한 현지 조사에서 하시마와 미이케의 가이드들은 ㉔-2 교재에 기재된 내용과 마찬가지로 탄광을 ‘가족과 같은 커뮤니티’로 소개하며 조선인 역시 그 구성원이었다고 하거나 조선인 등 강제노동의 역사에 대해 ‘모른다’고 설명했다. ‘㉔ 현지 가이드 연수’에 참가한 ‘㉔ 구성 자산 현지에서 항상적으로 안내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은 현지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이나 팸플릿보다 관람객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존재임을 감안하면, 이들에게야말로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 제4항 g호 권고사항과 일본의 약속 내용을 제대로 인지시켜 ‘설명(인터프리테이션)’에 반영시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

2020년 3월 31일에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현재 공식 리플릿이 없는 상황이다. 2020년 6월 15일 일반에게 공개된 직후에는 일본 근대산업유산 등재 신청서 요약 리플릿(일문, 영문)과 앞서 살펴본 ‘㉔ 인재 육성을 위한 교재’ 중 ㉔-1과 ㉔-2가 배포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액세스 가이드 맵’만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 관람은 각 전시실에 상주하는 가이드가 계속 안내하고 해설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하시마 출신인 주임 가이드 나카무라 요이치(中村陽一)는 ‘진실의 역사를 추구하는 하시마 도민의 모임’ 간사장으로, 2020년 6월 23일 한·일 언론사 취재에 대해 “군함도에서는 강제노동 같은 것이 없었는데 왜 한국 언론은 ‘있었다’라고 보도해요? 왜 한국 분들은 군함도를 지옥섬 등으로 부르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군함도 출신자로) 옛 주민들의 증언을 무시한 거짓말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참을 수가 없어요”라고 말한 인물이다. 2020년 7월 산업유산정보센터 방문자에 따르면 나카무라 외에 미쓰이광산과 야하타제철소 근무 경험자도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모두 고향과 회사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안내했으며 강제노동에 대한 전문성이 현저히 부족해 보였다고 한다. 여러 방문자에 따르면 이들 가이드는 특히 2존의 하시마 전시 부분과 3존에서 “한국이 트집을 잡아 비난한다”, “저렇게 난리를 치면 돈이 되니까. 지금 난리 치는 건 돈이 목적인 거예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기꺼이 일하러 왔어요”, “사고가 일어나면 죽는 건 일본인도 조선인도 마찬가지고, 차별 같은 건 없었어요”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현재는 긴급사태선언으로 가이드들에 의한 안내, 해설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들은 2015년 일본의 약속 및 조선인 등 강제노동의 역사를 부정할 뿐 아니라 혐오 발언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현지 가이드 경험이 있는지, ‘㉔ 인재 육성을 위한 교재’로 ‘㉔ 현지 가이드 연수’를 받은 이들인지, 혹은 산업유산국민회의 직원으로 있는지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해석 전략의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서』(2020년)에 따르면 향후 ‘㉔ 현지 가이드 연수’를 산업유산정보센터가 맡아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토론문

슈메이 황(Shu-Mei Huang, 대만국립대학)

조 건(동북아역사재단)

이현경(한국외대)

전진성(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토론문

슈메이 황(Shu-Mei Huang, 대만국립대학)

The significance of including narration of victims' stories haven been noted in both the study of History and Heritage. Historians pointed out the flaws of teaching history only based on perpetrator actions. Much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victims and to keep more nuances in navigating the different telling of the past – the multiple pasts. Likewise, arising in Heritage Studies is an increasing recognition of interpreting heritage in a way that allows form room to contest hegemonic constructs and articulates the need for justice. Presenting heritage to make conflict visible rather than homogenizing the past are seen as more critical and innovative if it can be done in a constructive way rather than as weaponizing the past. Without making past conflicts visible, then, will make the discourse of “peace” void and abstract, which is unfortunately what it is in the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in light of UNESCO’s mandate for peace. Despite having a list of heritage sites as representative of the most tragic events of human history (including both Auschwitz Birkenau, German Nazi Concentration and Extermination Camp and Hiroshima Peace Memorial, among others), the gesture and statement of paving way for peace have been mostly delivered by avoiding/addressing conflicts. It should be clear enough by now that human history is very much about competition, negotiation and confrontation and we have not done enough to learn lessons from the past.

If we really want to talk about peace building then we need to talk about peace building by whom and for what. Peace building, if remaining in diplomatic context, seems to remain always vague and superficial in East Asia. Survivor testimonies and the presence of survivor memories and passage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constructing a more victim-centered narrative but we also need to ensure enough room for accommodating diversity and differences. For example, in accounting the Holocaust, some historians are bringing attention to non-Jewish survivors of the Holocaust (for example, see some first-person accounts by the homosexuals and the disabled in *A Mosaic of Victims: Non-Jews Persecuted and Murdered by the Nazis* and in Richard Plant's work *The Pink Triangle*). In the Hiroshima Peace Memorial Park, the erection of the Memorial for Korean Victims is critical in reminding the world that many Koreans were forced to come to Japan in search of work and therefore had lost their lives along with Japanese victims in the tragic atomic bombing in Hiroshima. Accommodating different narration and presentation next to the UNESCO World heritage Hiroshima Peace Memorial (Genbaku) does not compromise but instead, contribute to its outstanding universal values, revealing how the brutality of war killing erased the historical border-crossings driven by imperial aggression.

토론문

이현경(한국외국어대학교 문화유산학센터)

2015년 7월 일본 메이지 산업유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메이지 산업유산을 둘러싼 해석의 문제가 본격화되었다. 일본 메이지 산업유산은 과연 동양 최초의 산업혁명을 이룬 자랑스러운 장소인가? 아니면 아시아 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 노역이 이루어진 아픔의 장소인가? 장소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은 동아시아의 풀리지 않은 역사 분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무대로까지 확대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뿐 아니라, 문화유산학계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첫째, 평화와 통합의 상징이었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논쟁과 불화의 중심이 되었다는 점이 문화유산학자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둘째, 문화유산 장소를 둘러싼 기억의 다층성 및 그 기억의 충돌이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직접 체감하면서 문화유산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 토론문을 통해 메이지 산업유산 등재 이후 진행된 최근 문화유산 해석 전략의 논의를 정리하고, 이에 따른 도쿄 인포메이션 센터 큐레이션 방향성 제고를 언급하고자 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핵심 개념인 Outstanding Universal Value는 주로 밝고 찬란한 인류의 문화적 성취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메이지 산업유산의 Outstanding Universal Value는 1850년대부터 1910년대 메이지 일본이 이룬 산업 발전을 중심에 둔다. 따라서 밝은 산업유산의 성취 뒤에 숨겨진 강제 노역자들의 희생과 고통의 이야기가 포함되는 것이 기존의 Outstanding Universal Value와 상충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Our Heritage Initiative를 통한 문화유산학 학자들은 기존 세계 문화유산의 장소에 multiple voice, multiple stories, multiple values를 발견하고 세계유산의 narrative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에서 지난 몇 년간 문화유산해석 회의를 통해서도 이러한 문화유산학의 흐름을 반영하였는데, 존재하였지만 영광스러운 거대 내러티브에 가려진 이야기를 재발견하고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문화유산의 이해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에서 그동안 소외된 원주민 관련 유산(indigenous heritag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호주는 대표적 원주민 유산인 Rock Art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베트남의 Phong Na-Keh Bang National Park도 뛰어난 자연경관에 대한 Outstanding Universal Value 강조하였으나 최근에는 이 장소에서 살았던 원주민의 삶의 이야기를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다수 문화유산 전문가들은 아름다운 풍광과 문화의 성취 뒤에 숨겨진 원주민, 여성, 노예, 강제 노역 등에 관한 이야기가 포함되는 것이 세계유산에 대한 다층적 이해에 필요하다고 동의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추구하는 다층적 가치 추구는 최근 다수의 박물관 큐레이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잊혀진 이야기(forgotten stories), 그동안 소외되었던 이야기(marginalised stories)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박물관 전시가 증가하고 있다. 한 예로, 영국의 채널 아일랜드는 세계 2차 대전 동안 독일군에게 유일하게 점령당한 지역인데, 이 지역의 전시는 주로, 독일군과 맞선 영국인의 용맹함과 투쟁 정신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독일군에 의해 고문당한 영국인들의 이야기, 상처받은 영국인들의 이야기 즉 피해자 중심의 전시가 런던에서 열렸다. 또한 영국 리버풀의 국제 노예 박물관은 노예의 관점을 중심으로 하여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방문객이 다층적 시점으로 역사적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균형적 전시도 이루어지고 있다. 북 아일랜드의 Museum of Free Derry의 경우는 1960년대의 시민 평등권 운동(civil rights movement)를 주제로 다양한 시각으로 시민 평등권 운동에 접근할 수 있는 전시 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 몬테소리 peace foundation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2차 대전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시각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다음 세대가 균형있는 역사 시각을 갖도록 돕는다.

이처럼 문화유산 해석을 둘러싼 논의와 실제 박물관 큐레이션 방향성을 고려할 때, 도쿄 인포메이션 센터는 메이지 산업유산의 내용을 다층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즉, 산업유산을 통해 이룬 성취뿐만 아니라, 그 찬란한 영광 속에 가려진 산업유산에서 이루어진 강제 노역의 역사를 전달함으로써 세계문화유산의 다층적인 가치를 전달할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강제 노역 희생자를 위한 추모 전시, 그리고 한국, 중국, 연합군 강제 노역자들에 대한 균형 잡힌 전시는 다음 세대에 moral education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보존과 보호 중심에서 다양한 해석으로 그 중요성이 변화하고 있는 이 시기에 도쿄 인포메이션 센터가 모범 사례로서 균형잡힌 역사 시각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길 바란다.

토론문

전진성(유네스코한국위원회)

I. 운영실태

- 2020년 6월 15일 일본 총무성 제2청사 별관에 위치한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가 개관함. 동 센터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산업유산 23개소에 대한 개요, 일본 산업 발전의 역사, 그리고 강제노동이나 민족차별을 부정하는 자료와 증언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전시해옴.
- 이중 강제노동과 민족차별을 부정하는 내용의 전시는 가혹한 조건에서의 강제노동 사실을 인정하고 그 희생자를 기억하는 차원에서 정보센터 설립을 비롯한 해석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특히 강제노동 피해자 증언의 오류는 지적하지만 강제노동 피해의 증언 자체는 전시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의도적 편향성의 증거라 판단됨.

II. 대응 방안

1. 세계유산위원회 차원에서의 대응

- 먼저,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비롯하여 일본이 생산, 배포하고 있는 정보들이 의도적 편향성에 바탕을 두고 생산된 것임을 지적하고 유산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던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2015년)의 권고에 위배되

며 일본 스스로의 약속을 깨뜨리는 행위라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이러한 정보들이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2018)가 권고했던 관계 당사자 간의 대화를 바탕으로 준비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유산의 전체 역사 이해를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 간의 성실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차기 세계유산위원회(2021년 6월, 중국 푸저우 예정) 권고문에 당사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언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e.g. 일본산업유산에 강제 동원되었던 국민의 당사국: 특히, 이 부분은 한일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인, 연합국 포로를 포함하는 다자간 문제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동 센터가 일본 총무성 제2청사 별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사전예약제와 관람인원 제한, 사진촬영의 제한, 매우 엄격하고 통제된 관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은 전시 내용과는 별개로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접근 보장을 통해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세계유산에 대한 이해를 도와야 할 당사국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하는 것이며 자유로운 정보 접근성 증진을 강조하는 유네스코의 철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음.

2. 세계유산위원회 밖에서의 대응

- 강제노동의 본질을 알리는 역사자료와 피해자 증언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역사적 사실로서의 강제노동 문제를 후대에 알리기 위한 작업이 필요함. 특히 피해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유산의 기억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음. 다만 강제노동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문제 제기가 국가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발목 잡기’로 비춰지지 않도록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산업유산과 강제동원의 문제는 한일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인, 연합국 포로를 포함하는 다자간 문제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이는 일본이 주장하는 “국가총동원법에 의한 한국인 노동자의 동원” 논리를 반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 한편, 갈등유산에 대한 모범적 해석/해설 사례 발굴, 일본산업유산 정보센터와의 비교 연구 등을 통해 일본산업유산 해석/해설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주

요 내용이나 적용시킬 수 있는 해석/해설의 방식에 대한 자료 또한 체계적으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음.

- 국제 학술자료 및 연구논문,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나라의 시각이 투영된 양질의 정보들이 유통될 수 있도록 국제적 여론/홍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관련 부처/기관/단체/전문가의 협력은 물론 국제적 교류/연대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함.

memo

memo

memo
